

## 미·중 안보갈등에서 한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현재**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G2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의 핵심은 '아시아로 복귀'와 '재균형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기존의 육상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관계**에는 사실상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패권경쟁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른바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중관계의 전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점이 축소되면서 국가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과 제조업의 부활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57개 회원국들이 수주를 위해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금융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낮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무기체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전략무기의 등장으로 중·미 간 상대적 군사력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

## 목 차

1. 들어가는 말: 미·중 안보갈등의 등장
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관계
3. 미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전개
  - 가.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 나. 경제 및 국제금융 질서 관련 미중관계
  - 다. 군사적 대결구도에서의 미중관계
4. 결론: 미·중 안보갈등의 정책적 의미와 전망

## 1. 들어가는 말: 미·중 안보갈등의 등장

- 현재의 국제질서는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G2에 의해 재편되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유럽과 중동지역에 국가 차원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고 대외정책을 추구하다가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며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했음. 그러나 IS가 테러활동의 범위를 유럽으로 확대함에 따라 유럽의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대테러 공조를 구축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으로 관심을 옮기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감소. 한편, IS의 러시아 항공기 격추로 중동지역에 대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진
  - 중국은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기존의 육상 실크로드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주도하여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여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 정책을 표명
-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표면적인 협력관계와 달리 실질적으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뿐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패권경쟁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우방국인 일본 및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함으로써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
  - 중국은 미국의 패권질서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적인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 금융, 그리고 무역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질서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미국의 시대였던 20세기에서 미·중의 시대인 21세기로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계기를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보는 시각과 함께,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당연한 사실로 수용하려는 경향을 바탕으로 미·중 안보갈등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제관계이론에 기초해 동아시아 지역질서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맹 및 다자협력과 같은 다각적인 외교경쟁의 구도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시도와 대응에 대한 분석
  - 경제발전의 차원, 그리고 국제 분업구조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지위가 보장해준 무역흑자라는 중국의 국가이익이 대미 경쟁력 확보에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
  - 미국과 중국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협력적 관계’ 및 ‘화평발전’과 달리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군사력 경쟁의 현실적 의미와 전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 대한 전망을 제시

- 2016년 전개되고 있는 미중관계는 미국의 재부상과 중국의 제동으로 기존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저유가에 따른 미국 내 제조업의 회복 등으로 미국경제의 재부상이 예견되는 한편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패권경쟁에 중국이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패러다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함
  -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침체라는 일반적 설명의 이론적 적실성이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대응으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도식적 대응책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음
  - 북한의 4차 수소폭탄 실험에 대하여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 목소리로 규탄과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지만 실제 제재조치에 있어서는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냄
  - 실제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음

## 2.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관계

-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변화: 동아시아의 중요성 확대
  -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사할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해오다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정책 전환
  -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직면한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으로 명칭을 새롭게 완화하여 변경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본질은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여전히 큰 변화가 없음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의미의 중요성이 미국의 정책적 입장 선회에 반영되었듯이, 미중관계와 미국의 세계전략은 서로 연계되는 상황
-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은 공식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6가지 주요 행동원칙을 표명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중 양국은 표면적인  
협력관계와 달리  
실질적으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뿐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도  
패권경쟁을 추진  
실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반감을 드러냄*

**아시아에서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는  
중국 국력의 상승에  
따른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1) 주요 5개국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 양자간 안보동맹 강화; 2) 중국을 포함한 부상하는 국가와의 유대 강화; 3)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참여 확대; 4) 무역 및 투자 증대; 5) 광범위한(broad-based) 군사력 배치(military presence); 6)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대
- 미국은 동아시아로 회귀에서 재균형전략으로 이름을 변경했지만, 본질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와 군사적인 봉쇄가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되었음에는 큰 변화가 없음
- 아시아에서 중국의 대미정책 변화는 중국 국력의 상승에 따른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2011년 9월 화평발전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발표: 1) 국가주권; 2) 국가안전; 3) 영토안정; 4) 국가통일; 5) 중국의 헌법을 확립하는 국가정치체제와 사회대국의 안정; 6)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초 보장
  -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른바 ‘반접근 및 지역 거부 전략(A2AD: anti-access and area denial)’을 수행
  - 남중국해에서 산호섬에 활주로 건설공사 등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해,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군사행동은 중국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됨
- 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중국의 다자주의 협력체 시도는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구도를 반영하는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력 수준에서 미국의 글로벌패권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패권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 있는 미국 중심의 기존질서에 다자주의를 활용하여 미국을 역외국가로 규정하고 영향력을 배제하려 시도
  - 미국의 아시아 다자주의는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멤버십 게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 동반자 협정(CEP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에 대한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하여 중국의 주도로 RCEP의 대응

-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에 미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노력

### 3. 미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황의 전개

#### 가.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

- 미 군사력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전략 개념의 변경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 공세로 미국에 도전
  -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개념을 수정하여 한 곳에서는 전쟁 수행을, 다른 곳에서 도발세력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개념으로 전환. 이는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 따른 것으로, 재정적자에 따른 국방비 감축압박에 따른 것임
  -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000년 225억 달러에서 2011년 899억 달러로 4배 증가하였고, 중국은 신무기 도입과 연구개발 분야에는 2000년 73억 달러에서 2011년 258억 달러를 투입하며 미국의 군사력을 추격하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총 군사비는 581억 달러로 중국의 129.4억 달러에 비해 4배의 차이가 있으나,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
- 중국은 무역흑자를 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미국의 강경 대응에는 후퇴하는 전략
  - 중국은 미국과 G2를 구성하는 화평굴기를 넘어 대국굴기를 통한 신형 대국관계 설정이 가능한 현실을 구체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지만 현실적인 장애에 직면하면 도광양회와 같이 한 발 물러서는 행보를 보임
  -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강경한 대국굴기에서 후퇴하여 보다 유화적인 화평굴기로 선회. 이를 바탕으로 영토 및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베트남, 한국 등과도 관계 개선을 추구
  - 실제로 2016년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관계로 대미 견제를 위한 군비강화와 대미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이 약화되고 있음
- 중국은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제질서에 대해 중국의 적절한 지위와 역할 보장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질서를 수정하려는 시도를 지속
  - 군사안보, 경제와 무역, 금융과 통화, 지식과 정보의 4개 주요 영역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하고 장악해 온 구조적·규범적 권력의

*미 군사력의 상대적 쇠퇴로 인한 전략 개념의 변경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 공세로 미국에 도전  
중국은 무역흑자를 통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미국의 강경 대응에는 후퇴하는 전략*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복된 양자관계  
확대에 의한 국익  
확보에 대응하여  
중국은 다자주의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이에 미국은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응수**

- 들을 중국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중국은 세계적 차원의 패권 도전이 시기상조라면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국제공공재가 패권국인 미국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미국이 동아시아에 수립한 양자협력의 중복에 의한 군사적 패권에 대해서는 다자안보협력구도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 다자협의체에 의해 구축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질서에 있어서는 새로운 다자협력체를 제안하고, 출범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다면적인 도전을 전개
- 미국은 중국의 추격에 대해 다자외교 활용, 동남아 국가와의 양자협력 강화, 소프트파워에 중점을 두는 외교정책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구사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중복된 양자관계 확대에 의한 국익 확보에 대응하여 중국은 다자주의의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이에 미국은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응수
  -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관계의 강화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와도 양자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봉쇄전략을 추진
  - 미국은 하드파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파워에 대한 외교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대중국 억지력을 확대
-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호섬 간척을 통해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함.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미중대결이 격화되고 있음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소유권과 이익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군사화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9도련선에 근거해서 남중국해 수역의 80% 이상에 영유권을 주장
  -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건설되는 인공섬들 주변의 12해리 안쪽으로 미 해군 함정이 항해하도록 하고,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나. 경제 및 국제금융질서 관련 미중관계

- 중국은 덩샤오핑(邓小平)이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30년간 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로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력을 성장시켜 오고 있음
  - 중국의 경제규모는 1978년 3,635억 위안에서 2011년 4조 7,154위안으로 13배 성장하였음.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한 중국은 미국에 이어 경제규모 2위가 되었으며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2009년 독일을 추월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
  - 중국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공산당 정부의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통한 수출주도형 무역전략을 바탕으로 투자국의 신뢰를 획득한 데 있음
  
-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이 가졌던 장점이 감소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분출되면서 중국의 국가관리 능력에 대한 한계가 노출
  - 1980년대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의 제조업 생산규모는 2010년 미국을 추월하여 1위가 되었음. 반면, 2015년 현재 중국 정부가 임금 인상과 복지정책을 요구함으로써 그간 제공해 온 저임금 노동력의 장점이 사라지자 동남아로 공장 이전이 속출하고 있음
  -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환경, 자원, 및 일부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의 희생을 통해 단기간에 달성된 것.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침묵과 희생의 강요로 잠재되었던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구체화되면서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전환됨
  - 2015년 7월에 시작된 중국 증시의 폭락 장세는 중국 경제제도의 허약한 기초와 실물경기의 둔화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중국 당국은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무리한 규제와 시장 개입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
  - 주요 고객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수출주도형 전략이 위기를 맞자 중국의 제조업이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짐. 이러한 현상은 ‘중등소득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이라는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 미국의 경제적 부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G2 또는 신형대국관계의 설정은 현실성이 줄어들음
  - 2016년 경기전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소비, 기업·주택, 투자 등 민간수요가 증가세를 보여 2.5%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고용지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이 가졌던  
장점이 감소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분출되면서 중국의  
국가관리 능력에  
대한 한계가 노출.  
미국의 경제적 부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G2  
또는 신형대국관계의  
설정엔 현실성이  
줄어들*

**AIIB를 통해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지도력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중국이 독자적인  
금융질서를 수립하려는  
시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  
57개 회원국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AIIB가 중국이  
국제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작용할지는 의문**

판단되며, 셰일가스 개발과 같은 국가 경쟁력 회복의 주요 요인들이 다수 잠재하고 있음

-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미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및 저유가로 관련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같은 불확실성은 존재
- 중국은 지속적인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 증가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장목표치인 7.4%의 달성도 어려운 현실
-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6.4% 수준의 경제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경기 침체와 함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경기하방 압력이 심화되어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침체가 나타나고 있음

○ 국제금융질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지도력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AIIB를 통해 중국이 독자적인 금융질서를 수립하려는 시도가 순항할지는 미지수

- 중국은 육·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미국의 포위전략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로 진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1,000억 달러 규모로 아시아 역내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시도
-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을 능가하는 AIIB를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시도
- 일본은 기존의 ADB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대안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1,100억 달러 투입을 약속함으로써 중국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을 무력화
- AIIB의 출발로 중국이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을 천명했으며, 장기적으로 일대일로에 따른 인프라 건설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한편, 57개 회원국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AIIB가 중국이 국제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작용할지는 의문

#### 다. 군사적 대결구도에서의 미중관계

-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점하고 있는 군사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 재래식 해·공군력 증강에 매진했으나, 이는 1950년대의 패러다임으로 현재 미국의 군사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노정
- 구소련의 항공모함 바랴그(Varyag)를 개조하여 만든 라오닝함과 함모

- 탐재기로 개발한 쥘(殲)-15(J-15)'의 항모 이·착륙 성공은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력으로써 현실적 위협이 되지 못함
- A2AD를 위한 해군력과 공군력에 초점을 둔 첨단 군사력의 개발과 확보는 장기적으로 전략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의 첨단무기 분야에서 미국을 추격하며 미국의 신무기 체계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전개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인민해방군 공군사령부를 찾아 우주항공 일체화와 공격·방어를 겸비한 강대한 공군 건설을 주문. 이에 부응하듯이 중국은 공군과 해군에 중점을 두면서 최근 최대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중국의 공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대안을 모색하고, 초음속 잠수함, 투명망토, 무인함정 등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 중국의 군사개발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의 작전능력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094 핵잠수함에서 쥐랑(巨浪)-2 잠수함 탑재 대륙간 탄도탄 발사실험을 실시. 또한, '항모킬러'로 불리는 동풍(東風)-21D 탄도미사일을 도입해 미 해군의 항모전단을 위협하는 무기를 갖추고 대형 수송기 윈(運)-20의 비행에 성공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t급 대형 군용수송기를 자체 제작, 스텔스 전투기 쥘(殲)-20, 쥘-31의 시험비행을 계속하면서 중형 폭격기 홍(轟)-6K를 실전 배치하는 등 현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전략핵무기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의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력 경쟁의 패러다임 변경을 주도하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미국의 기술적 진보에 대해 총력대응으로 추격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은 레이저 포, 레일건, 아이언맨 갑옷과 같은 신무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중국의 전통적 군비경쟁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해군 및 공군력의 지속적인 증강 추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첨단 군사력 격차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단거리 경주처럼 조금씩 추진되는 미국과의 군비경쟁은 위험한 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B-52 스트래토 포트리스, F22-랩터, P-3C 오리온 해상초계기, SBX-1 X밴드 레이더, 샤이엔 SSN773 핵추진 잠수함과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전략핵무기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의 첨단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력 경쟁의 패러다임 변경을 주도하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미국의 기술적 진보에 대해 총력대응으로 추격을 시도하고 있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국력은  
상승하겠지만,  
EU나 일본과 같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도 확대되어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G0'라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도래를  
예견하는 시각도 있음

같은 첨단무기에 대응하여 중국은 음속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개발, 마하10의 탄도미사일(WU-14) 등 신무기의 개발로 미국의 위협에 맞서고 있으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

#### 4. 결론: 미·중 안보갈등의 정책적 의미와 전망

- 이 글은 국제질서의 구조를 미국의 패권유지와 중국의 도전이라는 패권경쟁의 구도로 인식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중 안보갈등의 전망을 제시
  -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논의되던 장주기이론(long cycle theory)이나 힘의 전이이론(power transition) 등을 원용하여 국제체제에서 힘의 분배가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전되는 과정에 G2라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체제를 형성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룸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국력은 상승하겠지만, EU나 일본과 같은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영향력도 확대되어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G0'라는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도래를 예견하는 시각도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방위에 걸친 도전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 중심 질서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또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부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돌입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회복되어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가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 강대국관계는 최근 30년간 미소 양대 진영의 대결, 미국의 단일 패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미국의 부활의 재연과 같은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음. 이를 바탕으로 2020년 또는 2030년까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전망하는 시각도 다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중국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한 결과로 보임
  - 천안함 사건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중 군사관계를 보면 중국의 A2AD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봉쇄와 경제적 공동화라는 미국의 장기적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동아시아 영토분쟁,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같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과 군사력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무기 경쟁에 매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이것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력의 분산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음

-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주도권 대체보다는 적절한 역할 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하는 타협안과 중국이 원하는 기대치 사이에는 괴리가 큼
  - 중국은 국제경제와 금융에서는 물론 군사안보영역의 주요 주제인 양안관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 북한 핵문제 등에서 보다 독자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 허용하는 자율성의 범위는 그다지 넓지 않음
  - 미국은 중국 대신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대 중국 봉쇄에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음
  - 경제적인 면에서도 패권국가인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는 국내시장의 접근이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추동력이라는 것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넓지는 않음
  -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호주, 싱가포르, 태국과 추가적으로 양자동맹을 강화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추격 의지를 와해시키는 한편 일본에게 동아시아 국가로서 세계경제 2위 자리를 향한 경쟁,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향한 경쟁과정을 촉발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국익을 확보
-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사이버안보, 에너지안보, 자원안보, 기술안보, 인간안보와 같은 새로운 안보이슈가 부상하고 있으나, 미·중 간 대결을 신냉전시대의 도래로 부르기도 함. 그러나 이는 기존의 군사안보를 대체하는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로 보기 어려움. 기존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또는 국력 대결의 개별 분야에 해당하는 수준
  - 사이버 안보가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대결 분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이슈가 될 가능성은 낮음. 정치적 차원에서 미국이 사이버공간에서도 힘의 우위를 유지 또는 확대하려는 전략에 대해 중국은 추격과 균형을 달성하려는 구도로 전개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에너지안보 문제는 기후변화레짐과 맞물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새로운 정책이슈로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경제성장, 원자력 안전, 핵무기 비확산과 연계되어 전통적 안보의 부차적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인권 문제와 같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정책 분야도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적, 산업적 측면과 대외정책 측면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바이오, 반도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추격 의지를 와해시키는 한편 일본에게 동아시아 국가로서 세계경제 2위 자리를 향한 경쟁,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지역패권국의 지위를 향한 경쟁과정을 촉발시킴으로써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국익을 확보*

**미국과 중국의****총력경쟁에서 중국이****미국의 패권을****대치할 수 있는****대안 패러다임을****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중국의 한계.****미국이 패권국으로서****제시해 온 국제정치****패러다임에 근거하여****미국의 역할을****대체하려는 경쟁적****시도를 통해서 가능한****중국의 부상은****제한적이며,****궁극적으로 중국이****미국의 패권을 대치할****가능성은 낮아 보임**

인터넷 정보와 같은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안보경쟁도 산업과 경제에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주도권 유지의 구도라는 기존의 국력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의 총력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의 한계.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제시해 온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경쟁적 시도를 통해서 가능한 중국의 부상은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대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제1차·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개인의 행복, 시장경제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국제사회에 표방했으며, 당시 소련도 사회주의, 평등,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동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전파했음. 이에 비해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치는 없음
  - 실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모양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공자학당과 같이 미국이 추진했던 공공외교 모델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나마 중국체제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와 인권과 같은 의제는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 저자 약력

##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